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

2013. 6. 13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그간 통상정책의 평가 2

Ⅲ.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 3

Ⅳ. 추진과제 4

1.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4

2. 산업 · 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7

3.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9

4.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12

Ⅴ. 달라질 통상한국의 모습 13

Ⅰ. 추진 배경

◈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-이행-국내대책이 단일 창구(single window)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

○ 통상과 산업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, 소통 및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필요

□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

○ **(Mega FTA)** 대외적으로 선진 거대경제권간의 FTA,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-중간의 주도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

* 미-EU FTA, 미국 주도의 TPP,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 등 본격화

○ **(신흥국 부상)** 중국, 인도등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신흥국들이 늘어나면서, 신흥국과 통상협력* 수요가 증가

* 신흥국들은 시장개방 목적의 FTA를 경계하면서,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통상협력을 강력하게 선호

○ **(비관세장벽)**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통관, 표준, 인증, 환경,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확대됨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작용

* WTO/TBT 통보문 건수가 '12년 사상최대(1,560건)를 기록

□ 대내적으로는 대기업·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* 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

* 수출의 고용기여도 지속 감소: 고용유발계수(명/10억원) ('00) 10.9→ ('05) 8.0→ ('10) 5.9

○ **(중소기업·서비스산업)**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·중견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: ('10) 34.5% → ('11) 33.2% → ('12) 33.2%
* 서비스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: 2.18%(16위)(상품수출 3.04%, 7위)

○ **(창조경제 생태계)** 국제적인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체계와의 연계와 함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

* 국가간 공동 R&D 사업(한-EU EUREKA 사업) 활성화, 지재권의 글로벌한 보호 등

Ⅱ. 그간 통상정책의 평가

1. 주요 성과

① **(동시다발적 FTA)** 미국, EU,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약 60%(GDP 기준)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*에 성공

* 세계 10대 교역국중 미국/ EU/ASEAN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

○ 아울러, 터키, 콜롬비아와의 FTA 타결, 한·중 FTA 협상 개시등도 큰 성과

② **(FTA 선점효과)** 우리 기업의 무역·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

* (例示) 韓-칠레 FTA('04) 이후 한국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2배이상 확대 (수입시장 점유율 1위 기록) → 日-칠레 FTA('07)이후에도 1위 유지

2. 한계점

① **(교섭성과에 치중한 측면)**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 등 FTA의 실효성 제고 대책과의 연계가 부족

○ 기업의 Needs가 큰 투자규제, 인증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신흥국의 협력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통상정책 추진 미흡

② **(대국민·산업계 소통미흡)** 산업계와 취약부문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

* 한미 FTA 대외협상은 1년 만에 타결('06.6월~'07.4월)되었으나, 국민적 합의 및 국내 비준 동의 확보에는 5년 이상 소요('12.3월 발효)

○ 원산지 증명 등 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기체결 F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

③ **(부처간 체계적 협업 미흡)** 통상교섭과 국내대책 수립 주체가 분리되어 일관성있는 통상정책 추진에 한계

◈ 통상기능을 일원화하여 통상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

◈ 이를 위해 그간의 '통상교섭' 중심에서 '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'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전환

Ⅲ.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

목표	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
정책 기조	①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② 상대국과 상생(Win-win)하는 통상전략 수립 ③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④ 협업 · 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

⇩

추진전략	그간의 통상정책 전략	新통상정책 전략
	FTA 교섭중심의 통상	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
통상교섭	· FTA Hub 구축	· 지역통합의 핵심축(linchpin)
통상협력	· 거대경제권 위주	·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
성과공유	· FTA 효과의 체감도 저하	·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(일자리 · 중소기업)
추진방식	· 분절적 통상추진체계	· 통상교섭-이행-대책 일원화
	· 정부주도	· 민관 협업과 소통

⇩

추진 과제
1.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
2. 산업·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
3.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
4.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

Ⅳ. 추진 과제

1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

추 진 전 략

◈ 기존 FTA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**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(linchpin)** 역할 수행

◈ 산업·자원·에너지 협력 등과 연계를 통해 전략적 신흥국,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**상생형 FTA 추진**

①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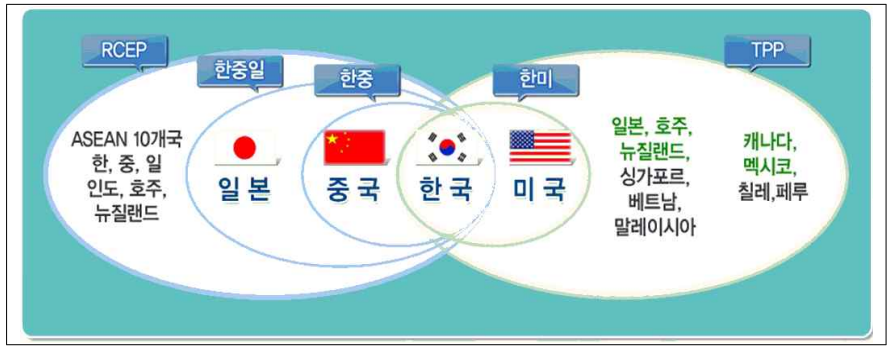
□ **(기본 전략)** 기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(linchpin) 역할을 수행

○ 한·중 FTA, 한·중·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

○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·중 FTA와 기체결된 한·미 FTA를 중심으로 아시아-태평양 경제통합의 허브 역할 수행

* 한·중, 한·인니, 한·베트남 FTA / 한·중·일 FTA / RCEP 타결시 우리의 FTA 무역비중은 35%('13)에서 69%('17)로 증가 전망

<아-태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>



□ **(한·중 FTA)**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고,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 확보

○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, 2단계로 나누어 협상

* 1단계 협상에서 협상분야별 지침(모델리티)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, 2단계에서 구체적 양허 협상 진행

□ **(동아시아 경제통합)** 한·미, 한·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

○ **(한·중·일 FTA)** 3국간 기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

○ **(RCEP)** 참여국간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FTA 추진동향, 수준 및 범위 등을 감안, 적극 참여

○ **(TPP)** 거대시장 활용 가능성, 국내적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

* 미·일 등 TPP협상 참여국과 정보교환 강화

2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

□ **(기본 전략)** 신흥국의 개발,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, 자원,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win-win 방식의 FTA 추진

○ 신흥국의 경제발전 동력을 우리기업 해외 진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여 업계의 실질적 이익 반영 추진

□ ASEAN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,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니·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추진

○ **(한·인니 CEPA)** 상품, 서비스·투자 및 규범 등 전분야 협상 가속화를 통해 타결 노력

○ **(한·베트남 FTA)** 한·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및 산업협력 내실화 도모

[참고] 전세계 통상환경의 변화

□ 동북아 중심 지역통합 논의 현황

구분	국가	무역규모(2012년)		명목 GDP(2011년)		인구(2011년)	
		십억달러	對세계 %	십억달러	對세계 %	백만명	對세계 %
한중일	한국	1,067	2.9	1,116.2	1.6	49.8	0.7
	중국	3,867	10.5	7,298.1	10.4	1,344.1	19.3
	일본	1,684	4.6	5,866.5	8.4	127.8	1.8
	소계	**6,619**	**17.9**	**14,280.9**	**20.4**	**1,521.7**	**21.8**
ASEAN+3	ASEAN	2,475	6.7	2,176.4	3.1	597.9	8.6
	소계	**9,094**	**24.7**	**16,457.3**	**23.5**	**2,119.6**	**30.4**
RCEP	호주	518	1.4	1,486.9	2.1	22.3	0.3
	뉴질랜드	76	0.2	158.9	0.2	4.4	0.1
	인도	783	2.1	1,826.8	2.6	1,241.5	17.8
	소계	**10,470**	**28.4**	**19,929.9**	**28.5**	**3,387.9**	**48.6**
TPP (일본포함)	소계	9,545	25.9	26,593.4	38.0	784.4	11.2
	미국	3,883	10.5	15,075.7	21.6	311.6	4.5
	EU	11,719	31.8	17,610.8	25.2	503.5	7.2
전세계		**36,890**	**100.0**	**69,899.2**	**100.0**	**6,974.2**	**100.0**

* 출처: (1) 무역규모: WTO, (2) 명목 GDP: IMF World Economic Outlook, (3) 인구: World Bank

□ 5년후 주요국의 경제구도 변화 전망

〈 현재 〉

(전세계 비중, %)	한국	일본	미국	EU
FTA 시장규모(GDP기준)	57.7%	17.3%	31.4%	34.2%
FTA 시장규모(인구 기준)	41.3%	30.6%	10.4%	17.2%
FTA 무역규모	35.4%	18.9%	39.4%	70.5%

⇩

〈 향후 〉

(전세계 비중, %)	한국*	일본	미국	EU
FTA 시장규모(GDP기준)	76.9%	80.5%	65.7%	64.0%
FTA 시장규모(인구 기준)	62.1%	63.2%	21.2%	23.5%
FTA 무역규모	68.5%	63.7%	63.8%	75.9%

* 한·중·일 FTA, 일·EU FTA, RCEP, TPP, 미-EU FTA 타결 가정시(한국은 TPP 불포함)

※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GDP, 인구기준 시장규모 산정시 자국 포함하여 계산

3 WTO 다자협상 적극 대응

□ **(WTO 쌀 관세화)**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'14.12.31일자로 만료 예정*인 바,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쌀 관세화 정부 방침 결정

*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'95~'04년 간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, '04년 유예기간을 '14년까지 추가연장

○ 쌀 수급전망, DDA 협상동향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

□ **(복수국간 협상)** 복수국간서비스협정(TISA) 협상, 정보기술협정(ITA) 품목 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

* TISA(Trade in Service Agreement), ITA(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

○ 우리나라에 공세적 이익이 있는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, 민감 분야에 대한 예외 및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

□ **(DDA 협상)** DDA 분야별* 협상의 진전에 기여

* ①농업 ②NAMA(비농산물분야) ③서비스 ④규범(반덤핑,보조금,지역협정) ⑤환경 ⑥지식재산권 ⑦분쟁해결 ⑧무역원활화 ⑨개발

○ 특히, '13.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(MC9) 계기,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*에서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

* 무역원활화, 농업 일부, 개발/LDC(최빈개도국)

2 산업 · 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

추 진 전 략

◈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, 유형별(산업협력,FTA협력,자원협력,특화협력군)로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

◈ 분산된 통상협력 지원수단을 통합하여 산업통상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

1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

□ **(FTA 위주 협력)** FTA 활용 및 협상추진

○ (FTA 기체결국) 미·EU 등 선진국중 FTA 기체결 국가는 FTA 활용을 통한 시장확대 및 기업진출 효과 극대화

○ (FTA 협상국) 중국·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은 FTA체결로 관세·비관세 장벽 완화

□ **(산업발전협력)** 산업역량 전수, 산업협력+FTA 병행

○ **(산업화 본격화 단계 국가)** 인니, 베트남 등 산업화 본격화 단계 국가는 업종별 산업고도화 협력

○ **(산업화 초기단계 국가)** 미얀마, 파키스탄 등 산업화 초기단계 국가는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적정기술 보급 추진

□ **(자원·에너지 중심협력)** 자원협력 및 연계 플랜트 협력

○ **(전통적 산유국)** 사우디, 카타르, UAE 등 전통적 산유국은 안정적 자원확보 및 IT·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다각화 협력 추진

○ **(신흥자원부국)** 카자흐, 우즈벡, 아제르바이잔, 이라크, 모잠비크 등 신흥 자원 부국은 자원개발 연계 플랜트 협력 등

□ **(특화된 여건 관련협력)** 기술, 금융 및 물류협력

○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자원협력 병행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 금융연계 및 물류거점 중심협력

2 신흥국 맞춤형 지원

□ **(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(ECP*))** 신흥국의 산업·에너지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추진

* ECP: Emerging nations Co-development Program

* 통합지원시스템 구축, '신흥국 공동발전센터(KECC)' 설립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성 및 프로젝트化를 고려, 세부과제 발굴

□ **(복합지원)** 분산된 통상협력 지원수단을 통합하여 산업통상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

○ **(프로젝트 금융)** 한-중동 플랜트 펀드 조성('13), 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협력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

○ **(전략국가와 상생형 기술협력)** 신흥국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, 이를 우리 중소기업이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 창출

* 신흥시장기술협력협의회 구성('13), 신흥시장 협력유망 기술맵 마련('13), 글로벌 적정기술지원사업 추진('14), K-Tech Roadshow('13)

○ **(TTC 협력)** 기술협력, 인력양성, 금융지원을 결합한 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흥국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성과 극대화

* 기술개발(Technology), 인력양성(Training), 기술자문(consulting)의 패키지 지원

3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

추 진 전 략

◈ 통상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·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

◈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, 기업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, 무역구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기업을 보호

1.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

1 통상인프라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성과 극대화

□ **(신흥시장 동반진출)**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, 문화·복지·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&D·투자 등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

* (터키) 세계일류한국상품전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연계 개최('13.8~9월)

□ **(수주지원)** 프로젝트 수주지원단*을 구성하고,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을 Korea Business Plaza로 단일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('13.下)

* 재외공관, 무역관, 플랜트협회, 기업, 수은, 무보 등 정책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

□ **(유망시장)** 해외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인 조달* 및 서비스 분야 진출**을 적극 지원

*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: ('12) 8개 → ('13) 10개(LA, 프랑크푸르트, 런던 추가/ 빈 제외)
* 의료·전자정부·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

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발굴 및 해소

□ **(해외진출 정보제공)** 중기 수출 및 해외진출 집중 Care System* 도입을 통해 맞춤형 심층 해외 진출 정보 제공('13.下)

* 1:1 컨설팅형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단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

□ **(비관세장벽)** 산업부내에 '비관세장벽 대책본부(본부장: 차관보)'를 구성하여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적극 해소('13.下)

* 통상산업포럼을 중심으로 애로를 발굴하고, WTO·FTA·정부간 협의채널 등을 활용

3 창조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

□ **(창조경제 생태계)**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

* 국가간 R&D 사업 지원, 재외공관 중심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등

□ **(지재권·벤처)** 창의자본 및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활용 및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고,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 지원('13.下)

* 창의자본을 활용한 IP Pool 구축, 글로벌창업지원센터 운영 등

4 통상정책 및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**(제도 원활화)** FTA 자격상호인정 및 전문인력 비자취득 원활화 획득 등을 중점 협의하여 전문직 해외 진출기회 확대(산업부, 노동부)

□ **(인력 해외진출)** 청년·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*, K-Move Center 시범구축('13.11) 등을 통한 인력의 해외진출 사업 확대('13.下)

* 어학능력 우수 청년인력/전문성 보유 퇴직인력 매칭 : 몽골, 인도에 파견(8회, '12, 석탄공사)

2.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□ **(보완대책 체제 개편)** 한·중 FTA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 내용·구성 및 체계 개편

□ **(既 수립 대책 점검)**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과제를 재정비·관리

3. 既수립 국내보완대책의 점검

□ **(지원체계 강화)** 「FTA 활용촉진 협의회」를 통해 범정부으로 FTA 활용을 지원하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심의 One-Stop 서비스를 강화

*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(14명)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(12명)이 참여
** One-Stop 지원강화를 위해 FTA 콜센터 설치·운영('13.6월~)

□ **(애로요인 해소)**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, 인력양성 지원, 사후검증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해소

※ 「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」 수립('13.6월)

4.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무역구제 기능 강화

□ **(무역조정지원제도)** 한-미, 한-EU FTA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*을 마련('13. 下)

* 중진공 지역지부, 지방노동청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홍보 강화 등

□ **(확립 지연 반덤핑 제도)** 국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·벤처기업의 덤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확립 지연 반덤핑 제도* 운영

* 국내 중소·벤처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외국 기업의 의도적 제품 가격 인하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

□ **(협의체 운영)** FTA 既 체결 국가와의 무역구제 협의 기구 및 한-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매년 개최(필요시 농식품부, 해수부 등 관련부처 참여)

4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

추 진 전 략

◈ 정부 3.0 기조에 따라 정보를 적극 개방·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·협력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

○ 통상산업 포럼, 통상정보 One-stop 서비스 및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, 기업, 협회와 '통상 협업 커뮤니티'를 구축

□ **(소통·협업)** 정부 3.0기조에 따라 산업계, 전문가,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'통상 협업 커뮤니티'를 구축

○ **(산업계)** 제조업·농업·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'통상산업포럼'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('13.5월~)

* 산업부장관·무역협회장(공동위원장) 주재하에 22개 분과를 구성, 협상에 대한 소통 강화, 미시적 영향평가, 실질적 국내대책 마련 등 논의

○ **(전문가)** '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'를 국회추천인사 및 농어업·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

○ **(국회)** '통상절차법'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, 의무보고 사항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,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

□ **(관계부처)** '통상추진위원회'*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각 부처, 재외공관 및 지원조직의 통상기능을 강화

*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25명으로 구성하여 통상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,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·의결은 대경장에 요청

○ **(재외공관)** 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 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,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기능도 강화('13 下)

□ **(통상정보 One-stop 서비스)**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one-stop으로 제공 ('14 上)

* 해외진출 무역정보와도 연계하여 해외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
** (例示) 통상동향, 협상 추진동향, FTA 보완대책, 수입규제동향, 주요 프로젝트 동향 등

V. 달라질 통상한국의 모습

	현재		2017		2023
FTA 네트워크 규모					
FTA 시장규모(GDP기준)	56%	→	**77%**	→	88%
FTA 시장규모(인구비중)	41%	→	**62%**	→	70%
FTA 무역규모	35%	→	**69%**	→	85%
FTA 활용					
FTA 수출 활용률*	70%	→	**79%**	→	85%
중소 · 중견기업 수출비중	33%	→	**40%**	→	45%
수출 중소기업 수	8만 개	→	**10만 개**	→	12만 개
무역 · 투자 확대					
총무역(달러)	1조	→	**1조 4천억**	→	1조 7천
총수출(달러)	5,600억	→	**7,100억**	→	9,000억
서비스수출(달러)	1,100억	→	**1,800억**	→	2,300억
기술 수출비중(달러)	40억	→	**80억**	→	100억
FDI 유치규모	135억불	→	**145억불**	→	160억불
수출다변화 지수 (상위30개국 수출비중)	87.6%	→	**83.5%**	→	80.0%

* 한 · 미 FTA 기준

※ 통상로드맵을 기초로 전문연구기관(대외경제정책연구원)이 전망한 수치